# 주가·코인 폭락에 금리 인상…멘붕에 빠진 '영끌 2030'

## "빚내 투자했는데 어떡하나" 주린이·코린이 한숨만
## 밤에도 휴대전화 붙잡고 잠 못 이루는 등 일상 패닉
## "수입 절반이 대출 이자"… '이생망' 되뇌며 발 동동

#. 광주의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30대 남성 김모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지난달 말 장례식장에서 "지금이 비트코인 저점이다. 매수 타이밍"이라는 말을 듣고 대출까지 받아 가상화폐 2000만원어치를 샀다가 연일 폭락장이 이어지며 크게 손실 봤기 때문이다. A씨는 "코인 시장이 주식시장과 달리 하한가도 없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다 보니 어느새 평가액이 한줌도 되지 않더라"고 했다.

#. 광주시 동구 지산동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성 박모씨 역시 휴대전화만 보면 가슴이 울렁거린다. 2년 전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바닥을 친 뒤 "저점 매수해 재미를 봤다"는 동료들 말을 듣고 올 초부터 두 아들 명의로 주식을 사들였다가 연중 최저치로 연일 추락하는 주식 차트를 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 B씨는 "주식투자를 걱정하는 남편에게 '적금보다 주식이 낫다'며 수천만원을 투자했는데 가족들 볼 면목이 없다"고 했다.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 폭락 사태를 피하지 못한 광주 2030세대에서 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 이달 7일부터 6거래일 이상 코스피가 추락,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고 코스닥은 물론 미국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도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2030세대들이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다.

특히 광주 2030 직장인들은 최근 2년간 코로나 대응을 위해 공급된 과잉유동성 시장에서 치솟은 집값 때문에 "월급만으론 절대 내 집 장만을 못한다"는 기류가 팽배한 세대들로 꼽힌다. 40~60대 직장인들이 여유자금으로 투자한 것과 달리 일부 2030 투자자들은 소위 '영끌 투자'한 사례가 적지 않아 이번 폭락장에서 충격도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 동구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30대 남성 최모씨는 "매일 내려가는 가격에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다. 낮에는 회사에서 퇴근 뒤에는 아내 몰래 화장실을 오가며 휴대전화로 비트코인 가격을 보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손쉽게 비트코인으로 1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을 기억하고 여유자금 1000만원을 성급히 투자했던 게 뼈아프다"고 했다.

20~30세대에서는 자본시장 폭락 사태로 인해 뜸하던 카카오톡 단체방이 뜨거워졌다고 한다. 학교 동창생이나 직장 동료들과의 단톡방이 밤낮 가리지 않고 주식 관련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에서 농산물 소매업에 종사하는 30대 후반 김모씨는 "이번 주 들어 카카오톡 단체방이 주식 이야기로 뜨겁다"며 "실시간 인증 사진을 올리는데 친구 7명 중 4명이 손실을 봤더라. 많이 손해 본 친구는 2억원 이상 손실을 봤다며 인증 사진을 올렸다"고 전했다.

20대 직장인 이모씨는 "이번 폭락장을 보면서 '이번 생은 망했다'고 하는 친구들부터 '게임머니로 생각하자. 주식과 코인은 팔기 전까지 손실이 확정되는 게 아니다'는 말까지 반응이 천차만별이다"고 전하면서 "진짜 힘든 사람은 가진 돈은 물론 빚내서 영끌 투자한 친구들일 텐데 저와 제 친구들은 그 정도는 아니다"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직장인들은 카카오톡 단체방에 "선방하고 있다"며 평가액이 플러스 상태인 계좌 인증 글을 올렸다가 눈총을 사거나, 투자 권고를 섣불리 했다가 손실 본 지인들과 사이가 틀어진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영끌'하고 대출받아 집을 마련한 2030세대들의 한숨 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식과 코인 시장의 폭락을 부른 한 요인인 기준금리 인상의 충격이 고스란히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올해까지는 고정금리 기간이어서 괜찮은데 내년부터 변동금리 적용을 받아 매월 부담해야 할 이자가 큰 폭으로 오른다"거나 "앞으론 길게 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한 달 수입의 절반 가까이 이자로 내게 된다"고 전하며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5일 나주경찰서 앞 도로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나주경찰서 직장협의회 명의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독자 배경우씨 제공〉

# 행안부 경찰국 신설 추진에 일선경찰 반발 확산

## "독재시대 유물…즉각 철회하라"
## 광주·전남경찰직장협 입장문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집단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관들은 연일 노조 격인 직장협의회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독재시대 유물로서 폐지된 치안본부로 돌아가자는 거냐"며 정부에 각을 세우고 있다.

광주경찰·전남경찰 직장협의회는 15일 회장단 일동 명의로 '행안부 경찰국 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행안부의 경찰통제 방안은 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될 여지가 크며, 과거 독재시대의 유물로서 폐지된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라며 "이는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시민을 억압하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전남경찰 직장협의회는 "경찰청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인)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독립 외청으로 분리됐다"며 "이후 경찰권 행사 범위는 역대 정부마다 조정이 있었지만 독립적인 기관으로 지위를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6명을 사전 면담 후 인사발령을 낸 사례 등을 언급하며, "경찰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나주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청사 앞 도로에 "경찰 중립성 훼손, 경찰국 신설 철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며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이 알려진 이후 경찰의 첫 집단 반발은 지난 14일 나왔다. 경남경찰 직장협의회가 지난 14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첫 집단 성명을 낸 이후 각 지역경찰 직장협의회 명의의 성명과 입장문, 1인 시위 등이 계속되고 있다.

일선 경찰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내무부 시절 치안본부 부활" "경찰 권력 장악 시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 자전거 교통사고 6~7월 최다 발생

## 고령자일수록 사망 확률 높아

광주 지역 자전거 교통사고가 6~7월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자일수록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본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광주 지역 자전거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광주에서는 총 658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11명, 부상자는 694명으로 조사됐다. 2017년 135건, 2018년 134건, 2019년 135건 등 해마다 130여건 안팎의 사고가 발생했다.

전체 사고 중 6월에는 75건, 7월에는 78건의 사고가 발생해 23.25%를 차지, 연중 가장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지역 교통사고 치사율은 1.67%로, 전국 치사율인 1.61%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치사율은 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를 뜻한다.

운전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치사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확인됐다. 20세 이하 운전자 치사율은 0.57%였으나, 65세 이상 운전자는 2.48%로 4배 이상 뛰었다.

사고 당시 안전모 착용률은 18.5%에 그쳤으며, 미착용률은 5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23.9%는 안전모 착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학기마다 재계약·매주 3시간 강의…시간강사 퇴직금 줘야"

퇴직 당시 주당 강의 시간이 3시간에 불과하고, 6개월 마다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시간강사라고 해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3단독 김종근 판사는 전남대 시간강사를 지내다 2019년 퇴직한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원고 측이 청구한 퇴직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1억400만원 가운데 4000만원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쟁점은 A씨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였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 이전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우선 원고 측은 "1994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전남대에서 법학개론 등을 담당하는 시간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했다"며 "퇴직금 1억4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주장했으나 피고 측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시간강사의 경우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해서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다"며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대해선 "시간강사도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업무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 자료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근로시간을 강의 시간에 한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

상담문의 010-3733-3933